

경제위기 이후 중·미관계 변화와 한반도

박동훈 (연변대학교 교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부진과 중국의 약진이라는 총체적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중·미 간 상호인식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미국주도의 국제체제에 중국을 '결박'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국가이익 내지는 후발산업국가들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체제에 대한 재편(개혁) 의지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양자관계는 한반도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와 함께 더욱 많은 관심을 '아·태지역으로의 귀환', 특히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집중했다. 중국은 북한체제 위기, 남·북갈등 심화, 미국의 강경태도 등에 대응하여 북한체제 유지와 한반도 안정을 목표로 북·중관계 개선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결국 중·미 간 전략적 이해차이로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강대국 간 미스매칭(mismatching) 국면이 초래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은 보다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반도 위기관리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한국정부는 국제체제라는 시각에서 대북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 중견국가로서 한국은 이념적 차원을 초월하여 강대국 간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비스마르크적 외교 테크닉이 필요한 실정이다.

목 차

1. 서론
2. 중·미 양국의 대외전략 변화
 - 가. 미국의 대중인식과 전략변화
 - 나. 중국의 대외전략 담론 및 대미전략 변화
3. 한반도 위기와 중·미 갈등의 본질
 - 가. 2010년 한반도 위기와 중·미 갈등
 - 나. 중·미 양국의 대북정책 비교
4. 결론 및 시사점

1. 서론

- 미국 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주로 다음의 영역들에서 변화가 나타남.
 - 서구발달국가들의 퇴진과 후발산업국가의 약진.
 - 권력중심이 서구로부터 아·태지역으로 이동.
 - 초강대국 미국의 부진과 신흥대국 중국의 부상.
 - 글로벌 이슈를 둘러싼 강대국 간 협력 또는 경합 증대.
- 미국 헤게모니(Hegemony)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중국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세계정치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 고자 함. 그러나 강대국 간 세력 변화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미비한 상태.
- 본문은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래 중·미 양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주목하고자 함. 즉, 경제위기 이래 중·미 간 상호 인식이 변화되면서 ‘상호 견제’와 ‘반견제’ 의도가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기본 가설로 제시함.

2. 중·미 양국의 대외전략 변화

가. 미국의 대중인식과 전략변화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미국의 위상과 중국의 영향력 상대적 증대라는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미국 내 학계에서도 대 중전략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됨.
 - 현실주의자들은 ‘세력균형이론(balance of power theory)’의 시각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미국 패권적 지위 및 현행 국제체제에 도전자로 간주함. 심지어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의 시각은 중국의 부상은 경제적 성장에서 군사적 팽창까지 이어질 것이며 이 에 따라 국제질서 재편을 위한 긴장과 갈등 속에서 전쟁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주장.
 - 이에 반해 자유주의자들은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체제 에 도전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은 불가역적인 역사적 추세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주의자들과는 달리 중·미 간 충돌은 피면할 수 있다고 봄. 환언하면 중국을 현존 서구 중심적 국제체제에 편입시켜 기존 체제 내에서 자체의 전략적 목표를 선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미국은 응당 자신을 현존 국제질서의 유력한 지지자로 부각시키고 공통된 가치와 규범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민주국가들에 정치적 연대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지배역량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함.¹⁾ 아이켄베리(G. John Ikenbery)의 이러한 주장은 현재 미국 학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면서 주류적 시각으로 자리 잡음.
- 오바마 시대 미국 정계에는 대중전략에 있어서 온건파(The doves)와 강경파(The hawks)가 존재함. 온건파²⁾는 대화와 접촉을 통해 외교·군사 등 영역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자 함. 이들은 중국을 자극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상호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전제로 전략적 신뢰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주장. 이에 반해 강경파는³⁾ 강제적 외교수단과 적극적인 군사적 확장을 강조하면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필히 강경한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국제질서에서의 미국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
- 오바마 집권 초기 온건파들이 발언권을 장악하면서 중·미관계는 한 동안 ‘밀월기’에 진입하였고 상호 밀접한 대화와 접촉을 유지함. 그러나 기후협상, 대이란제재·북핵문제·환율문제 등 영역들에서 갈등이 심화되자 중·미관계는 다시 소원해지기 시작. 이 와중에 미국 내 여론에서 중국 ‘오만론(傲慢論)’이 대두되었고, 힐러리를 위수로 한 대중 ‘실망파(失望派)’들의 발언권이 확대됨. 이에 따라 미국정부의 대중정책은 ‘중·미접촉론’으로부터 ‘대중 강경론’으로 선회하기 시작했음.⁴⁾

나. 중국의 대외전략 담론 및 대미전략 변화

- 개혁·개방 30년간의 중국의 급성장,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부진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총체적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에 의해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의 중심위치에 놓이게 됨.
- 줄곧 ‘도광양희(韜光養晦)’라는 저자세 외교를 대외전략 기조로 삼아 왔던 중국으로서는 강대국 이미지가 부각되는 데 대해 다소 곤혹스

*개혁·개방 30년간
중국의 급성장,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부진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총체적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에 의해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의 중심
위치에 놓이게 됨*

**대미 강경론자들은
일방적 타협이나 양보로
중·미관계 안정을
추구하기보다는 각
이해관계 영역에서의
전략을 보다 명확히
하고, 특히 정치적 경쟁
관계, 군사적
측면에서의 소극적
협력을 명확히 해야만
양자 관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봄**

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 환언하면 ‘사회주의국가’, ‘제3세계국가’, ‘신흥대국’이라는 다중적 신분으로 인해 중국은 어떤 시각을 대외전략 구상의 출발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견해가 달리 될 수 있음.

- 자유주의적 시각: ‘도광양회’ 대외전략 기조 유지.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출발하는 이른바 온건파들은 현시점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여전히 ‘겸손하고 신중한(謙虛勤慎, modest and prudent)’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국내적으로 산적해 있는 민족문제·빈부격차·국가통일 등 문제들은 줄곧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중요변수로 작용해옴. 또한 실제로 중국은 경제적 수준 등 국력의 측면에서 미국에 비해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전략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⁵⁾

- 대외전략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대미정책에 있어서도 이들은 ‘대항보다 대화’, ‘견제보다 협력’을 선호하면서 보다 냉정하게 중·미관계를 처리해야 함을 주장.⁶⁾ 중·미관계는 공통이익을 출발점으로 시행착오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동시에 점차 협력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신흥대국과 패권국 간의 구조적 갈등을 해결하고 전방위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임.⁷⁾

- 현실주의 시각: 전략적 안보의식 강화의 필요성 제기

- 현실주의자들은 상대적으로 비관적 시각에서 국제환경을 평가.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오는 압력과 도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단지 ‘도광양회’의 기조로 안보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

- 이들의 핵심이익은 절대로 강대국에 양보해서는 안 되며, 또한 미국이 중국에 대해 펼치고 있는 ‘C형 포위(C型包圍)’ 전략에 대해 필요할 경우 ‘근육 과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⁸⁾

- 대미 강경론을 펴고 있는 대표학자로는 옌쉐통(閻學通)을 들 수 있음. 그의 견해에 따르면,⁹⁾ 부상하는 중국과 패권국인 미국 간 구조적 갈등으로 인해 중·미 간 전략적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봄. 중·미 양국은 본질적으로 상호 갈등적·적대적 이익이 공통 이익·상호보완적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협력관계보다는 적대적 관계가 크다(敵大于友)’는 것임. 따라서 일방적 타협이나 양보로 중·미 관계 안정을 추구하기보다는 각 이해관계 영역에서의 전략을 보다 명확히 하고, 특히 정치적 경쟁관계, 군사적 측면에서의 소극적 협력을 명확히 해야만 양자 관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봄.

- 주목해야 할 바는 이론적 패러다임의 범주를 초월하여 상당수 중국 학자들 속에서 대외전략 영역 개척론(拓展論)이 회자되고 또한 점차 공감대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 즉, 이들은 중국의 성장과 국제사회 지각변동에 부응하여 중국의 외교영역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함.
 - 친야칭(秦亞清)은 도광양회 전략 기초가 여전히 유효하지만 오늘날 국제사회는 중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대 국제제도 및 질서의 변혁과정에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봄. 따라서 중국의 대외전략 기초는 ‘도광양회 주(主), 유소작위 보(補)’로부터 ‘도광양회, 유소작위 병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¹⁰⁾
 - 왕지스(王緝思)도 중국의 대외전략 목표 설정에서 응당 수동적 입장(不要什么)에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要什么)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 외교목표는 단지 힘의 추구나 해외시장 확대가 아닌, 이념·제도적 혁신을 추구해야 하며, 따라서 중국은 시장규범과 국제제도 개선, 공정한 국제질서와 규범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¹¹⁾
- ※ 요컨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발전도상의 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력에 있어서 서구국가들에 비해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보고,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국내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지구화 시대 국제사회와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국가이익과 연관된 영역들이 부단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은 서구 중심적 국제체제에 대한 재편(개혁)의 의지를 나타내기 시작함.

이론적 패러다임의 범주를 초월하여 상당수 중국학자들 속에서 대외 전략 영역 개척론이 회자되고 또한 점차 공감대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 즉, 이들은 중국의 성장과 국제사회 지각변동에 부응하여 중국의 외교영역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함

3. 한반도 위기와 중·미 갈등의 본질

가. 2010년 한반도 위기와 중·미 갈등

〈표 1〉 2010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중·미 갈등

일시	사건
3.26	천안함 사건 발생
5.24	천안함 사건 관련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5.24-25	중·미 S&ED에서 천안함 사건 관련 대북 비난문제 논의(힐러리 VS. 다이빙귀/戴秉國)
6.02	한국 언론 서해(황해) 군사훈련에 미 항모 참여 소식 발표

6.02	중국, 미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 방중 거부
6.05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중·미 격론(로버트 게이츠 VS. 마샤오 텐, ‘馬曉天’)
6.09	미국 참모장연석회의 의장 마이크 물런(Mike Mullen), 천안함 사건 관련 중국태도 비난
6.23-8.01	미국,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등 14개 국가가 참여한 ‘환태평양 2010’ 합동 군사훈련 하와이 해역에서 실시 ¹²⁾
6.30-7.05	중국 인민해방군 동해함대 주산군도 이남해역에서 실탄사격 훈련 실시
6.26	G20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 천안함 사건 관련 중국태도 비난(有意視而不見)
6.29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입장 발표: - 중국은 어느 한 쪽도 비호하지 않으며, 공정한 태도를 취할 것임. - 사태를 진일보 악화시키지 않을 것임(불는 불에 키질하지 않을 것). - 중국은 한반도 인근 국가로 십만 팔천 리 밖의 국가가 느끼는 감수와는 다르다고 표명
7.01	중국인민해방군 부참보장 마샤오텐, 미 항모 서해(황해) 진입 반대
7.01-15	중국 외교부, 연속 5차례 항모참여 군사훈련 반대 입장 발표: - 중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군사적 활동도 반대 - 각 측의 냉정과 절제 요구, 지역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희망
7.16	중국인민해방군은 서해(황해)에서 ‘교통전비(交通戰備) 2010’ 군사훈련 실시 ¹³⁾
7.25-28	‘불굴의 의지’ 한·미 합동군사훈련 일본해에서 실시(1979년 이래 최대 규모)
7.26	중국 해방군 중국 남해해역에서 대규모 실탄훈련 실시
7.27	해방군 제남부대 대규모 장갑부대 이송훈련 실시
8월말	미국의 초청에 따라 중국 외교부 부부장 추이텐카이(崔天凱), 워싱턴에서 중·미 간 공통관심 분야에 대한 정치협상 진행
9월	UN 확대회의, G20 서울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양국 정상 양국 공통관심사안 및 지역이슈에 관해 의견 조율, 양국관계 완화
9.05-08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서머스(Summers)와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도닐론(Donilon) 베이징 방문, 양국 간 긴장관계 해소 및 후진타오 2011년 방미관련 의견 조율
9.08	중국 중앙군사위 쉬차이허우(徐才厚) 부주석, 도닐론(Donilon)과의 회담에서 양국 군사 교류와 대화 필요성 제시
9.09	미 국방부 대변인 중·미 양국 간의 군사적 교류 확대 추진 계획 발표
9.27-28	미 국방부 동아시아 차관보 쉬퍼(Shiffer) 방중, 양국 고위급 군사교류 포석
10.11	아시안 국방장관 확대회의, 중국 량광례(梁光烈)과 미국 게이츠 회담, 고위급 군사교류 재개(10월 14일 하와이에서 중·미 해상군사안보협상 연례회의/MMCA, 2011년 초 게이츠 방중 등에 대해 논의)
11.23	연평도 포격 사건
11.28	워싱턴호 서해 진입, 한·미 합동군사훈련 실시

나. 중·미 양국의 대북정책 비교

1)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대북정책

- 오바마의 외교이념과 ‘아·태지역으로의 귀환’
 - 오바마는 부시 정부의 일방주의적 정책을 포기하고 패권적 지위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와 국제협력·제도화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이념을 결합하여 ‘스마트 파워’와 다자주의 외교를 강조함.
 - 강력한 군사적 능력을 기반으로 연성권력(soft power)을 영활하게 사용. 또한 다자협력을 통해 온건하고 도덕적인 색채를 띤 미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함.
 - 오바마 정부는 미국 대외전략의 ‘아·태지역으로의 귀환’을 누차 강조해왔음.
 - 2009년 11월 14일 오바마는 일본 방문 기간에 “미국은 태평양국가이며 태평양지역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 및 강화할 것”이라 표명. 2010년 1월 12일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는 “미국의 미래는 아·태지역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아·태지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미국 대외정책의 중점임을 역설.¹⁴⁾
 - 미국의 ‘아·태지역으로의 귀환’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아·태지역경제가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유럽·북미 등 지역과 함께 3대 경제권을 형성해가고 있음. 둘째, 전통동맹관계가 느슨해지면서 미국이 동지역에서의 지배권이 약화되는 추세를 보임. 셋째, 중국의 급속한 부상,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증대로 미국의 불안감 조성.
 - 미국의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 패권적 지위에 도전하는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됨. 따라서 중·미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은 ‘아·태지역으로의 귀환’전략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됨.
-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의도
 -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 미국의 동북아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님.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 특징을 볼 때 한반도 문제는 줄곧 ‘중요’하면서도 ‘절박하지 않은(不緊迫)’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중요한 이유는 a) 한반도 자체의 지정학적 의미로 인해 한반도는 줄곧 미국이 동북아 문제에 개입하는 중요한 전략적 레버리지 역할을 해왔음. b) 미국은 줄곧 대량살상무기(WMD), 특히 북한 핵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 미국의 동북아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님.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 특징을 볼 때 한반도 문제는 줄곧 ‘중요’하면서도 ‘절박하지 않은(不緊迫)’ 문제라고 할 수 있음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절박감이 없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개입점(介入点)으로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권 및
영향력 확대에
주안점을 둬**

개발을 미국 본토가 직면한 최대 위협으로 간주.

- 절박하지 않은 이유는 a) ‘불통불란(不統不亂)’의 반도 정세는 미국의 동북아 개입에 유리함. b) 오바마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국내 경제 복원임. 또한 중동 반테러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시급했던 관계로 한반도 문제는 여전히 오바마 정부에 우선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함. c) 최근 몇 년간 김정일 와병설 등 ‘북한체제 급변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미국은 관망적 태도 또는 대북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됨.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러한 인식 때문에 미국은 대북문제에 대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더욱 많은 정력을 ‘아·태지역으로의 귀환’ 전략에 집중. 환언하면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절박감이 없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개입점(介入点)으로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권 및 영향력 확대에 주안점을 둬. 2010년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바로 이러한 의도의 반영이라 볼 수 있음.
- 첫째, 비핵화를 우선적 조건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함. 힐러리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6자회담 내 우방국들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① 북한이 ‘6자회담 영구적 퇴출’로부터 다양한 6자회담 복귀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소극적 태도를 취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 요구.
 - ②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과 함께 대북제재 강도를 높임과 동시에 주변 해역 일련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 실시.
 - ③ 2010년 중국이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미대화-예비회담-6자회담’ 6자회담 재개 3보조 방안을 제시하자 미국은 거부하고 ‘남북대화-다자회담-6자회담’을 역제의함. 특히 ‘다자회담’은 중국의 영향력 약화 또는 배제의 의도가 있었음.
 - ④ 연평도 포격사건 발생 이후 미국은 중국이 제시한 6자회담 대표 긴급협상 소집 제안 거부, 오히려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 개최. 6자회담에 비해 한·미·일 3자 협력기제를 보다 중요시하고 동북아 역내 주도권 확보 및 중국에 대한 견제 시도 강화.
- 둘째, 느슨해진 한미·미일 동맹 복원, 진일보로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를 통해 동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했음. 미·일 동맹의 경우, 2009년 일본 정권교체로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하토야

마 정부는 미·일 동맹관계의 ‘평등성’을 강조, 보다 독립적인 외교적 입장을 제시. 양국은 후텐마기지와 인도양에서의 군함 급유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이해 차이 발생. 이 와중에 2010년 한반도 및 주변지역 정세는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조건을 마련해줌.

- ① 미국은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대북비난 행렬에 일본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한·미·일 3국 협력 필요성 강조.
 - ② 2010년 9월 조어도 갈등 발생 후 미국은 조어도는 ‘미·일안보 조약’ 적용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발표함으로써 동맹국으로서의 일본에 대한 방위책임 천명.
 - ③ 11월 APEC 정상회담차 요코하마를 방문한 오바마는 일본과 「미·일공동선언」 발표하고 새로운 방위협력방안을 제시하여 중국의 동해에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로 함.¹⁵⁾
 - ④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워싱턴호’ 항모가 중국 측 민감 해역인 서해(황해)에 진입. 한·미 합동군사훈련 강행 이후 곧바로 항모를 일본해로 이동시켜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한·미·일 사상 최대 규모 합동군사훈련 실시. 이번 군사훈련은 조어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것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 분명함.¹⁶⁾
- 셋째, 한·미동맹의 경우, 부시 정부시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외교이념 및 대북정책이 미국과 시종 갈등을 빚으면서 한·미동맹이 다소 소원되는 성향이 나타남. 그러나 친미적 성향을 띤 이명박 대통령 집권으로 한·미동맹 강화의 새로운 정치적 조건이 마련됨.
 - ① 2008년 한·미는 양국관계를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데 합의하고, 2009년에는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채택,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보장.
 - ②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미국은 한국이 발표한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전적인 지지를 보내고 또한 한국과 대북제재 및 군사적 억지능력 강화에 대해 약속.
 - ③ 2010년 6월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일정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
 - ④ 7월, 한·미는 사상 처음으로 외교·국방장관회의(2+2)를 개최, 신속한 합동방위능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양자, 지역 내지는 세계적 범위 내에서 동맹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대해 합의.¹⁷⁾
 - ⑤ 10월 8일, 한·미 양국은 북한 핵개발과 기타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막는 데 목적을 두고 연합군사위원회를 구성. 이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이외의 국가와 맺은 첫 번

미국은 한반도 및 주변사태 발전을 기회로 삼아 일본, 한국의 대 미국 안보 의존도를 제고시키고, 이들 국가로 하여금 진일보로 미국과의 동맹안보에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함

**국제체제 시각에서의
불 때, 북한은 중국의
대미 ‘반견제’전략의
중요 레버리지로서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음**

째 연합군사위원회임.¹⁸⁾

- 넷째, 미국의 주도로 다자주의 외교노선을 추진하여 북한을 고립시키는 동시에 자국의 정책 정당성을 강조하고 진일보로 중국에 압력을 가함.
 - ① 부시 정부에 비해 오바마 정부는 협력적 외교의 측면에서 보다 영활성을 보임. 즉, 강력한 군사적 역량을 기반으로 다자협력을 호소함으로써 미국 주도로 지역문제들을 공동 대응하려 함.
 - ② 미국은 유엔 등 국제무대를 활용하여 다자주의 활동 전개. 예컨대, 천안함 사건 안보리 회부를 적극 지지함과 동시에 아세안지역포럼(ARF) 등 무대를 이용하여 북한의 ‘호전성’, 그리고 중국이 이를 비호하고 있다고 비난함으로써 미국외교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고자함.
- 미국은 한반도 및 주변사태 발전을 기회로 삼아 일본, 한국의 대미국 안보 의존도를 제고시키고, 이들 국가로 하여금 진일보로 미국과의 동맹안보에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함.

2) 중국의 대북인식과 정책변화

○ 중국의 대북인식

- 정책결정자의 대북인식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줄곧 중국 국제환경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한 ‘문호’ 역할을 해왔음. 한편, 비록 상이한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나 ‘반제투쟁’에서 쌓은 이념적·정치적·군사적 공감대는 여전히 상당한 지속성을 띠고 있음.
- 국내 경제차원에서 볼 때, 중국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 과정에서 북한의 대외 문호역할이 더욱 절박해지고 있음.
 - 지역발전 불균형해소의 목적으로 중국정부는 2003년 ‘동북노공업기지 진흥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한 데 이어 2009년에는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두만강지역 개발 계획 강요(图们江区域开发规划纲要)’,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발전계획(辽宁沿海经济带发展规划)’ 등 일련의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국가의 개발의지와도 연관되지만, 지역협력의 실현은 역내 경제행위자들 간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개방도 및 밀접한 경제적 연관성이 강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관계를 존속시켜 줄 수 있는 조화로운 정치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음.¹⁹⁾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은 중국의

-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음.
- 국제체제의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은 중국의 대미 ‘반견제’ 전략의 중요 레버리지로서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는 다음의 몇 가지 배경이 작용함.
 - 2008년 이후 ‘북한체제 급변사태’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회자되면서 미국·한국 등 국가들의 대북 강경태도가 강화됨과 더불어 북한 붕괴 이후 서구형 민주주의국가 건설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함.
 -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들어서면서 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됨. 남·북 양국은 강경 VS. 초강경 태세로 한반도 정세는 무력 충돌 직전까지 치달게 됨. 2009년 이후로 대북 강경태도를 빌미로 한미·미일 동맹이 복원되는 추세를 보였고 대규모 합동군사 훈련이 중국 주변해역에서 진행되면서 중국 안보압력을 자극.
 - 북한체제 붕괴로 미국주도로 한반도 판도가 재편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대외 영향력 확대의 중요 기점으로 삼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감수해야 했음. 따라서 더욱 적극적인 태세로 위기상황을 관리해 나가고자 함.

○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 2009년 중반 이후로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북·중 양국의 협력과 교류가 급속히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임.
-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전략적 제휴 강조.
 - 3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 양국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양당, 양국 전통우의 전승과 고위층 왕래, 국내문제를 포함한 전략적 소통, 국제 및 지역문제 협조 강화 등에 대해 공감대 형성. 이는 북한 후계체제 및 중국 제5대 지도부 출범 이후의 양국관계에 대한 입장을 서로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이는 중국이 양국 지도부 간의 전략적 신뢰를 강화하고 중국의 대북 정보력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경제협력 측면: 경제무역 확대로부터 공동개발의 참여 확대.
 - 북·중 고위층 교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무역규모도 가파른 상승세를 탐. 특히 남·북경협이 경색 국면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남·북무역 포함의 경우) 이미 50%를 넘어섬. 북·중 무역은 이미 2007년 19.76억 달러에서 2010년 34.6억 달러로 약 14.8억 규모 증가. 이에 반해 남·북교역의 4년

2009년 중반 이후로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북·중 양국의 협력과 교류가 급속히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전략적 제휴가 강조됨

**북·중 양국은
경제무역과 대북
투자에만 집중했던
기존 형식을 벗어나
지역공동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양자 경험이
보다 강화되고 있음**

간 증가 폭은 1.13억 달러에 불과.

- 경제무역과 대북 투자에만 집중했던 기존 형식을 벗어나 지역공동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북·중 간 양자 경험이 보다 강화되고 있음. 2009년 10월 원자바오 방문과 압록강대교 건설에 대한 제안에서 유의할 점은 같은 시기 중국정부는 이미 「중국 두만강지역 협력개발계획 강요: 창지투를 개발·개방의 선도구로」(2009.8.31),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발전규획」(2009.7.1)이 비준되었기 때문에 당시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지역공동개발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²⁰⁾
 -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경제문제는 항상 논의의 중심이 됨. 김정일 위원장은 현 단계 조선노동당의 사업 중심은 민생개선이라 강조하면서 중국기업 대북투자를 환영함과 동시에 양국 간 실무적 협력 수준제고를 희망함. 한편, 중국은 북측 경제발전 및 민생개선을 지지할 것이라 표명하면서도 ‘정부주도, 기업위주, 시장운영, 호혜공영’의 중국식 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했고,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북한에 적극 소개하고자 함.
 - 2010년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정부가 북한이 가장 기피하는 개혁개방의 문제를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적으로 거론하였다는 점임. 후진타오는 경제중심노선·대외개방·사회주의 건설 경험·치당치국(治黨治國) 경험 등 구체적 개혁개방 현안들을 직접 제시했고 원자바오도 “개혁개방 경험 소개 의사가 있음”을 김정일에 직접 밝힘.
 - 2011년 6월 8일 북·중 양국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 착공식을 진행한데 이어 6월 9일에는 나선특별시에서 ‘중·조 나선경제무역구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 항목 착공식’을 진행. 또한 착공식 주최기관인 ‘중·조 경제개발협력 연합지도위원회’의 북한 측 최고 책임자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중국 측 최고 책임자로 천더밍(陳德銘) 상무부 부장(장관)이 참여함으로써, 공동개발사업이 중앙정부적 수준에서 추진될 것임을 보여줌. 양국은 상기 경제특구 건설을 통해 ‘조선대외교류의 실험지역으로 강성대국의 선구 지역으로, 조·중 경제협력의 시범지역으로 건설’한다는 비전을 내걸고 있음.
- 북핵문제: 북한체제 안정과 6자회담 재개노력.
- 첫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과도한 압력수단 사용을 거부.
 - ①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은 한반도 안정에 우선적 목표를 두고 ‘사건의 진실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요구해 나

서면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서 북한을 지목하는 것을 반대.

- ② 연평도 포격 사건 발생 이후에도 중국은 한·미의 연이은 군사 훈련에 대해 보다 ‘냉정하고, 절제적(冷靜, 克製)’인 자세를 취 해주길 요구.
- 둘째, 제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제1차 핵실험에 비해 다소 강도가 낮은 비난성명을 발표함과 동시에 신속히 대북 대화채널을 복구.
 - ① 중국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핵실험을 단호히(堅決)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제1차 핵실험에서 사용했던 ‘제멋대로(悍然)’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등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제1차 핵실험에 비해 다소 강도가 낮았다는 견해가 존재함.²¹⁾
 - ② 뿐만 아니라 제2차 핵실험 이후 북·중 간 외교활동도 제1차 핵실험에 비해 달리 나타남.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9개월 만에 대북 고위급 교류를 회복한 데 반해, 2009년 제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안보리 1874 대북제재안에 동의하면서도 불과 4개월 만에 양자 간 외교활동을 재개. 더욱 이례적인 것은 국제사회 대북 비난이 고조되던 시기에 중국 국무총리 원자바오(溫家寶)가 전격 방북,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하면서 국제사회 주목을 받음.
- 셋째,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
 - ① 중국에 있어서 6자회담은 중국 주도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점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책임 있는 대국 지위를 부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따라서 중국은 줄곧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해옴.
 - ② 2010년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6자회담의 재개 순서로 ‘북·미 대화 → 다자회담 → 6자회담’ 3보조 방안을 관련국들에 제안.
 - ③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이 폭발로 인해 반도정세가 초긴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한·미·일은 3자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제안 거부. 오히려 미국은 ‘남·북대화 → 다자회담 → 6자회담’이라는 본회의 재개 방안을 중국에 역제의. 그러나 미국이 제시한 ‘다자회담’은 중국의 역할을 축소 또는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중·미 간 6자회담 관련 견해는 공전상태에 빠지게 됨.
 - ④ 2011년 1월 후진타오(胡錦濤)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에서 모두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 즉 양국은 각자가 제시한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를 수정하

중국에 있어서

6자회담은 중국주도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점에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책임 있는 대국 지위를

부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중국은

줄곧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해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미 양국의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
중국 견제 강화 및
중국의 국제체제 재편
(개혁) 의도가
대립되면서 ‘갈등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여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이라는 절충안에 합의.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남·북 간 비공개 접촉이 속개되었고 곧이어 김계관이 4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6자회담 재개의 희망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

〈표 2〉 중·미 양국의 대북인식 및 정책 비교

구 분	미국	중국
전략적 가치	지정학적 가치	지정학, 지정학적 가치
북핵문제	중요하나 절박하지 않음.	중요하나 절박하지 않음.
전략	선 비핵화, 후 평화	선 평화(안정), 후 비핵화
수단	채찍	채찍과 당근
북한정권	체제붕괴	체제유지 및 개혁개방
전략적 동기	중국 견제	대미국 반견제 지역경제발전

4. 결론 및 시사점

- 중·미 양국관계의 차원에서 볼 경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미 양국의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 및 중국의 국제체제 재편(개혁) 의도가 대립되면서 ‘갈등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오바마 집권 초기 ‘밀월기’를 거친 미국이 글로벌 이슈들에서 중국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2010년에 들어 강경파들의 발언권이 확대됨. 2010년 초 미국의 대만 무기수출, 달라이라마 접견 등 사건이 터지면서 중국도 강경파들의 발언권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특히 한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안보문제가 불거지면서 양국 간 갈등이 군사적 영역에까지 확대되었음.
 - 총체적으로 양국은 비록 ‘갈등’과 ‘협력’이 특정시기에 돌출해지기는 하나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며, 갈등해결을 위한 양자 간 노력도 더욱 빈번해지고 있음.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미 양국의 정책의도를 비교해볼 경우
 - 상기 양국 간 상호 인식은 한반도 문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음. 미국은 ‘전략적 인내’정책을 중심으로 대화의 문턱을 높이고 대북제재를 강화하여 허약한 북한체제의 붕괴를 피하는 동시에 동북아시아에서의 주도권 복원에 전략적 동기를 두었음.

- 중국의 경우 2008년 이후 불거진 '북한체제 급변사태'설을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2009년 중반부터 서서히 북한 체제안정을 위한 정책조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미 양국 간의 전략적 이해차이로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강대국 간 미스매칭(mismatching)국면이 초래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보다 어렵게 함.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한반도 위기관리에 대해서는 중·미 양국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

○ 한국에 주는 시사점

- 동북아 국제구도 틀 내에서의 대북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앞에서 논의하다시피 동북아지역은 세계 강대국들이 다수 집결된 지역이며 또한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 강대국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판독하는 것은 남·북관계 문제를 푸는 것 못지않게 중요함.
 -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 오바마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대중 견제 및 동북아 주도권 복원이라는 차원에 전략적 중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중국의 반도정책은 미국 변수를 고려하는 측면이 큼.
 - 이에 반해 한국은 단지 대북문제에만 집중, 대국 간 변수를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었음. 현 한국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키우고 대북강경 노선을 유지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 그러나 북한체제 붕괴론, 한·미·일 공조 강화, 연이은 합동군사훈련 실시 등으로 인해 중국의 안보불안감 조성.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 우선, 북한체제 유지 등 중국의 전략적 고려가 영향을 미치면서 한·미와 북·중 간 갈등구도가 심화됨.
 - 실지로 현재 한국의 강대국을 상대로 한 외교는 딜레마적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 예컨대 중국은 한반도 정세가 악화될수록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미국을 주요 협상 대상으로 간주하고자 함. 이는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을 고려하기 때문임. 미국도 한반도 위기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중국과 견해를 같이함. 이러한 경우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 → 대북강경 → 반도정세 불안 → 중·미 타협 → 한국 소외'라는 전략적 수세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한·미관계 강화와 더불어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중·미 양국 간의
전략적 이해차이로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강대국간 미스매칭
(mismatching)국면이
초래되면서 한반도
문제해결을 보다
어렵게 함. 하지만,
한반도 위기관리에
대해서는 중·미 양국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

- 한·중 양국은 2008년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인식, 북핵문제 해결의 목표, 수단 등 차원에서의 견해차이가 노정되면서 정치적 불신관계가 확대되었음. 현실적으로 양자관계가 기존의 그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임.
- 한국은 냉전적 산물인 양자관계 위주의 현 동북아 정치구도를 타파하고 다자적 틀 내에서 안보 및 협력을 발전시키려는 전략 수립이 필요함. 중견국가로서의 한국은 강대국 간 이해관계 조정 또는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비스마르크적 외교 테크닉이 필요함.

기획 및 감수: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오은정(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저자 약력

■ 박동훈

現, 중국 연변대학교 정치학과 전임강사. 한국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음. 연구분야는 동북아 국제정치, 한국정치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두만강지역개발과 국제협력: 중국창지투(長吉圖)건설의 국제환경분석」,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한중관계: 천안함 사건 이후를 중심으로」, 「再论朴正熙时期韩国发展型国家的形成与演变」 등이 있음.

주석

- 1) G. John Ikenburry, "The Rise of China and the Future of the West: Can the Liberal System Survive?" *Foreign Affairs*, Vol. 87, No. 1, Jan /Feb 2008.
- 2) 대표적 인물들로 미 국무부 부장관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미국 국가안보위 원회(NSC) 아시아 선임보좌관 제프리 베이더(Jeffrey A. Bader), 중국문제 전문가 이반 미테이로스(Evan Medeiros), 주중 미국대사 존 헌즈먼 주니어(Jon Huntsman, Jr.) 등.
- 3) 오바마 집권시기의 힐러리(Hillary Diane Rodham Clinton) 국무부 장관, 동아시아 사무를 책임진 국무부 차관보 커트 캠벨(Kurt Campbell), 전 미국 국방부 장관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월레스 그렉슨(Wallace Gregson) 등은 모두 강한 매파적 성향을 갖고 있음.
- 4) Bill Gertz, "China Policy Fight", *The Washington Times*, October 21, 2010.
- 5) 金燦榮, "中國外交現狀與發展戰略", 「當代世界」2009年 第9期, p.12.
- 6) "警惕誤判與偏執沖擊中美關係大局", 「人民日報」, 2010年 8月 12日.
- 7) 楊浩勉, 「新時期中美合作的動力和阻力」, 「國際問題研究」, 2010年 第5期.
- 8) 戴旭 著, 「C型包圍: 內憂外患下的中國突圍」, 上海: 文匯出版社, 2010年.
- 9) 閻學通的 中·美關係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閻學通, "對中美關係不穩定性的分析", 「世界政治與經濟」, 2010年 第12期, pp.4-30.
- 10) 진일보로 秦亞青은 중국 국력이 성장하여 21세기 중반 중등발달국가 수준에 도달 하였을 경우 "도광양회 補, 유소작위 主"의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 박동훈,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중한관계: 천안함 사건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 정치」, 제27권 제2호, 2011년(여름), pp.127-128참조.
- 11) 王緝思, "中國的國際定位問題與韬光養晦、有所作為的戰略思想", 「國際問題研究」 2011年 第2期.
- 12) 동 군사훈련의 실제적 목적은 미국과 동맹국가의 해상 합동작전 능력을 과시하여 미국이 남중해역에서의 해상통로를 재확인하고 "아태지역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군사역량(중국 포함)을 방비"하는 데 목적을 둠.
- 13) 동 군사훈련은 "타국의 중국 해상 수송함대에 대한 원정공격"을 가정한 것으로 이례적임.
- 14) 网易: "經濟危機動搖全球力量對比美國調整戰略"心繫太平洋", <http://news.163.com/10/1231/16/6P8BLB3400014AED.html>
- 15) 京華時報, "奧巴馬稱支持日本'入常', 將加強日美同盟", 2010年11月14日.
- 16) 張小穩, "近期美國升高西太平洋緊張局勢的戰略意圖及其影響", 《東北亞論壇》, 2011年 第1期, p.55.
- 17) 人民網: "美韓同盟從'美主韓從'到'對等伙伴'", <http://world.people.com.cn/GB/13791083.html>
- 18) 王暉, "朝美關係: 劍拔弩張的背後", 《世界知識》, 2011年 第2期, 第29頁.
- 19) 박동훈, "두만강지역개발과 국제협력: 중국 '창지투 선도구' 건설의 국제환경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57호(2010), p.192.
- 20)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김정일 위원장의 '라선시' 현지도도를 계기로(2009.12.16) 라선시를 특별시로의 승격(2010.1.4), 국개발은행 설립(2010.1.20),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개정(2010.1.27) 등 일련의 경제개선조치를 단행한 것은 중국의 지역개발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고 봐야 함.
- 21) 閻學通, "朝核迷局猜想", 「領導翠文」, 2009年 第9期, p.135.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www.jejuforum.or.kr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제주평화연구원 (697-120)
Tel. 064-735-6532 또는 533 email. jejuforum@jpi.or.kr
homepage. www.jejuforum.or.kr

제주평화연구원은

2011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에서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을 주관하였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New Asia for Peace and Prosperity)' 라는 대주제 아래 평화와 안보, 경제, 경영, 환경, 문화, 여성, 의료, 도시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새로운 국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아시아 지역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김황식 국무총리, 아로요 필리핀 전대통령, 자오치정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위원장 등 국내외 고위인사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아시아 지역협력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었고, 64개 세션에 세계 22개국에서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포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중국 중견기업인 100여명을 포함, 국내외저명인사 1,8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규모면에서도 가장 큰 회의로서 종합국제포럼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성대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 개최식에서 공식화된 바와 같이 이제 제주포럼은 격년제 개최에서 매년 개최하기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 기획단을 발족하여 2012년 5월-6월 중 제7회 제주포럼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대의 종합국제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7회 제주포럼 부터는 포럼의 의제와 목적에 동의하는 국내외 기관과 단체가 세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세션을 대폭 개방할 예정입니다. **제7회 제주포럼에 대해 귀기관과 귀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제주포럼에 대해서는 포럼 공식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럼 참가문의는 제주포럼 기획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